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3년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월 소비자동향지수

기획 정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야 논의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1인 가구 동향 -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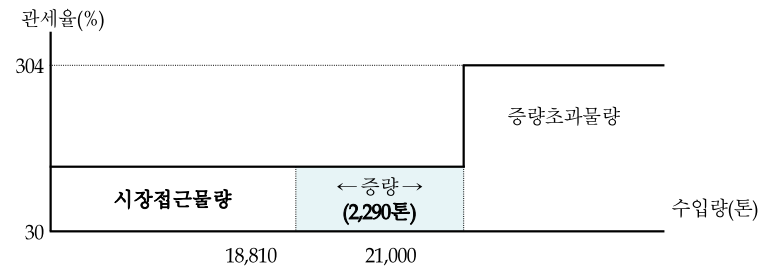
2013년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농림축산물 시장 접근물량 증량」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시장접근물량 제도

- **[개념]** UR 협상 당시 63개(HSK 기준: 227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
※ 예: 감자관세율 - 시장접근물량 이내 30%, 초과 시 304%
- **[시장접근물량 증량]**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UR 협상 시 산정한 저율 관세 적용 물량(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
-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대상 품목 및 물량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통해 규정

<시장접근물량 증량 개념도(예: 감자)>



주: 21,000톤 이내는 30%, 21,000톤 초과물량은 304%의 관세율 적용

□ 시행 주요내용

-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농림축산물 품목의 2013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
-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위원장: 농식품부 차관)가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요청

○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총 13개 품목에 대하여 당초 28.8만 톤 → 82.5만 톤으로 확대

- 개정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이 공포되는 1.30~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한하여 적용
- 대상품목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보조사료)**이거나 **국내 수요에 비하여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녹두·팥, 참깨)** 등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

구 분	품목수	해당품목
농축산 원자재	3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참깨유박
수급조절용 농산물	2	녹두·팥, 참깨
식품 가공 및 공업용 원료	8	땅콩, 가공용 대두, 감자, 기타전분(밀전분), 감자 변성전분, 감자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 **[파급효과]**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요 농정 이슈_2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8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 규정」과 2012년 11월 28일 발표한 「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인증제 개요

- **[정의]** 기업이나 단체가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 등에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도입배경]** 정부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농어촌 마을 간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농어촌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농어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
 - 그 결과 2004년 시작된 ‘1사1촌 운동’은 국내 100대 기업 중 73개 기업이 참여하여 9천 260쌍이 자매결연 체결, 2011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재능 기부’는 불과 2년 만에 2만 8천 여 명이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둠.
 -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형식적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사회공헌활동1)을 인증, 지원하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
- **[인증대상]** 농어촌 마을, 지방자치단체 간 MOU체결 등을 통하여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등
- **[자격요건]** 도농교류, 농어촌지역 투자 등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농어촌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
- **[심사 및 인증]** 신청기업에 대해서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한 후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확정

1)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어촌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말함.

○ **[평가기준]** 사회공헌활동을 전제로 한 조직체계(25점), 교류실적(40점), 사회 공헌 활성화(35점) 항목으로 구성

○ **[시행일시]** 2013. 1. 28일,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3호

□ 제도적 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우대

- 인증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융자금모 확대, 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정책과 연계 지원 확대

- 인증 기업에 대한 R&D,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 및 유관기관이 정책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물품구매·용역 계약 시 가점 및 사회공헌 교육 등 지원

- 물품구매·용역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조달청, 농어촌공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사회공헌 관련 교육 지원 등

○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우대 및 농어촌사회공헌활동 관련 홍보

□ 기대요과

○ 기업-지방자치단체 간, 기업-농어촌 마을 간 자매결연을 확산시켜 농어촌과 기업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발전 원동력으로 작용

○ 기업의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 우대제도 주요내용>

구 분	기관명	우대제도	주요내용
자금 조달	NH 농협은행	금리우대	• 인증기업은 농식품기업에 준하여 금리우대 * 대출상품별 0.1~0.3%p 금리우대
	수협 중앙회	여신금리 우대	• 인증기업의 기업대출상품에 대해 최대 연 0.2%p 이내에서 1회 금리우대
	중소 기업은행	신용등급평가 우대	• 기업의 금리인하, 대출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 등급평가 시 인증기업 우대
	기술보증 기금	보증우대 등	• 인증기업을 정부비책사업 우대보증으로 지정, 보증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 기금	보증우대 등	•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으로 운영'하여 보증료 인하 등 • 농식품 제조·가공·유통과 관련하여 공장설립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평가 시 우대
	농신보	보증우대 등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 소재 농어업 관련기업이 보증평가 시 가점, 보증료 인하 등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청 정책 자금융자 우대	•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정책사업	농식품부/ 유관기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등)	농림수산 정책사업 우대 지원	• 인증 기업에 대한 R&D,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 • 유관기관이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물품구매·용역업체 선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평가 신인도 가점 부여	• 정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매 적격성평가 세부기준'과 '중소기업자가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인증기업에 가점 지원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용역 적격평가 신인도 가점부여	• 인증기업에 대해 공사용역 적격성 평가 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계약관련 규정 개정 추진)
	농협	물품구매 적격평가 신인도 가점부여	• 인증기업에 대해 물품구매 적격성 평가 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계약관련 규정 개정 추진)
기타	한국 표준협회	회원가입 등 지원 우대	• 회원 가입 시 회비 할인, 인증대상기업 무료교육, ISO인증 평가비 할인 및 최고경영자 조찬회비 할인 등
	행정안전부 (지자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인증기업을 선정해서 통보해주면 '지자체 권고 및 설명회'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반영)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중 102로 전월대비 3p 상승**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6	101	100	101	99	100	100	99	102
(전기 대비 지수차) ²⁾	(0.3)	(△5.0)	(△1.1)	(0.4)	(△1.6)	(1.0)	(0.2)	(△0.9)	(2.9)
구 성 지수 의 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5	△0.5	△0.5	0.5	△0.4	0.2	0.0	△0.5
	생활형편전망	0.0	△0.4	△0.6	0.2	△0.4	0.4	0.2	△0.4
	가계수입전망	△0.7	△1.0	0.0	△0.3	0.0	0.7	△0.3	△0.3
	소비지출전망	0.0	△1.2	0.3	0.3	△0.9	△0.3	0.3	0.0
	현재경기판단	0.3	△0.8	△0.1	△0.3	△0.1	0.1	△0.1	△0.1
	향후경기전망	0.2	△1.1	△0.2	0.0	0.2	△0.1	0.1	0.4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3p 상승
-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대비 4p 상승,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A)	13.1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90	88	86	88	86	87	87	85	88	(+3)
생활형편전망CSI	98	96	93	94	92	94	95	93	96	(+3)
가계수입전망CSI	101	98	98	97	97	99	98	97	101	(+4)
소비지출전망CSI	113	109	110	111	108	107	108	108	107	(△1)

주: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

2)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난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과 동일,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대비 5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91로 전월대비 5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전월과 동일, **금리수준전망CSI**는 92로 전월 대비 5p 하락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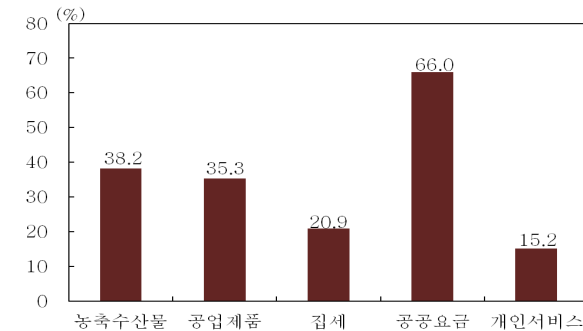
구 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A)	13.1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82	73	72	69	68	69	68	67	67	(-)
향후경기전망CSI	92	81	79	79	81	80	81	85	90	(+5)
취업기회전망CSI	92	86	83	83	86	82	82	86	91	(+5)
물가수준전망CSI	147	145	143	147	146	144	142	141	141	(-)
금리수준전망CSI	115	108	106	97	99	92	96	97	92	(△5)

주: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

□ 기대인플레이션

-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3.4%)보다는 하회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된 품목**에 대하여 공공요금(66.0%)>농축수산물(38.2%)>공업제품(35.3%) 순으로 응답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중*>



주: * 복수선택이 가능한 문항으로 총 합이 100%가 아님.

기획 정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야 논의 동향

※ 본 자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내용(2013.1.2527일)을 근거로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

- 박근혜 당선인 공약의 **최종목표**는 ‘**국민행복시대**’
- 주요 공약들은 성장목표나 전략보다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에 초점
- **농정분야의 정책목표**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

→ 희망과 활력이 있는 농촌 복원

- 농가경제의 침체,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의료 환경 등으로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촌 활성화 도모

→ **농정의 3대 핵심 축**

- **농민 소득 증대**: 농업을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연계한 종합산업화
 - 농업경영모델 개발·발굴·확산 방안 마련
 - 지역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특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모색
- **농촌 복지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재해보험 피해조사 현장실태 점검 대책 마련
- **농업 경쟁력 확보**: R&D투자 강화, 과학기술 적극 활용
 - 종자산업 육성 방안 및 농자재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

행복농업의 5대 약속	축산업의 5대 약속
•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기여 • 농자재 가격 안정과 담합 근절 •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 축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 • 사료값 안정화 대책 마련 • 축산업을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 •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축산경쟁력 제고 • FTA 협상 시 축산인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 추진케로 확정안 주요 정책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성장+일자리창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공약의 재원 마련과 거시 정책** 등은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주요 정책
1. 대기업 일자리 정책, 압박 - 상시 자속적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규모 정리해고 시 재난지역선포, 정리해고 시 기업 회피 의무 강화
2. 업종별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 불공정 행위 근절
3. 골목상권 보호대책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업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이행실태 점검 상시화
4. 대기업이 2차, 3차 협력사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현금 거래 의무화
5. 여성 기업 지원 위해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6. 재화의지 평가해 18조 원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 선정
7.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취업 후 채무 상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 감면
8.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인센티브 고안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9.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10. 기초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 상반기 국회 통과
11. 공공요금, 산정기준 투명화
12. 연대보증제 폐지
13. 중견기업 세제 혜택 강화
14.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15. 중소기업 인력대책 - 중소기업중앙회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16. 중소기업 R&D 지원 - 정부 지원 예산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17. 대통령 주재 분기별 무역진흥전략 회의, 코트라를 중소기업 지원 전문 기관으로 전환
18. 재형저축 국회 법안통과
19. 종자산업 육성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20. 농자재 담합 막기 위해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재 260개에서 2015년 400개 이상으로 확충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개최

- 경제1분과(1.25일): **경제민주화 추진 강조**,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
- 경제2분과(1.27일): **‘사후 정책평가’·‘피드백’ 강조**(10대 90의 원칙* 제시)
※ 정책수립이 10이라면, 정책평가·피드백은 90을 의미

<박근혜 당선인 농업현안 관련 발언 내용>

- “농업은 식품과 관광을 연계한 2차·3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 “농업은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을 육성시켜야”
-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확대, 농업경쟁력 확보를 3대 핵심 축으로 삼고, 이런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달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동향

1) 농식품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1.16일)

- '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개편
※ 농식품부가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범국민운동, 색깔 있는 마을 1만개 만들기, 농어촌 10만 리더 양성 등이 핵심 내용
- 직불금 확충,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자연 재해에 대비한 농어업 재해 보험 확대·내실화,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불량 농식품 사전차단·농식품 통합안전 정보망 구축,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방안 등을 보고

2) 정부 정책평가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인수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행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행 평가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검토** 중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의 체계화·내실화에 초점

※ 정부가 운용해온 정책평가 방식: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후 심층평가,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 등

- 사후 평가와 피드백을 중시(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한데 따른 것으로 좀체 개선되지 않았던 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의 선진국형 틀을 갖추는 계기 마련

3) 분과별 공약이행 입법계획 마련

- 인수위 각 분과위는 공약의 신속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작성,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할 예정
- 국정과제 토론회 종료되는 대로 분과별 국정과제 수정본 작성, 국정 기획조정분과의 검토 작업을 거쳐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

※ 참고문헌

- 제18대 대통령당선인 박근혜_www.park2013.com
- 농협경제연구소_CEO Focus 제300호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공약」(2013.1.7)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복한 농어촌추진단_제18대 대선 새누리당 농어촌 공약 언론설명자료_「-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2012.12)
- 농민신문 보도자료(2013.1.30) 「“농정 3대 축은 소득증대 복지확대 경쟁력 확보”」
- 아주경제 보도자료(2013.1.29) 「인수위, “분과별 공약이행 입법계획 마련”」
- 연합뉴스문 보도자료(2013.1.29) 「인수위, 정부 정책평가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경향신문 보도자료(2013.1.28) 「박 당선인,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 주문」
- 문화일보 보도자료(2013.1.28) 「‘GH노믹스’윤곽…꼼꼼히 뜯어보니」
- 중앙일보 보도자료(2013.1.28) 「박근혜 “정책수립은 10, 평가 피드백은 90돼야”」
- 동아일보 보도자료(2013.1.26) 「“예산절감 한계…세제 고쳐 공약재원 마련”」
- 서울신문 보도자료(2013.1.17) 「‘창업농 인턴제’ 도입 추진」
- 중앙일보 보도자료(2013.1.17) 「‘잘 살아보세’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 서울경제 보도자료(2013.1.16) 「농식품부 “제2 새마을운동” 추진」
- 해럴드경제 보도자료(2013.1.16) 「농식품부 ‘제2 새마을운동’ 추진」

[별첨자료] 당선인 인수위 경제1.2분과 토론회 발언 내용 요약(1.25.27일)

내 용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 “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해달라는 뜻” • “골목상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고민해 주기를” • “중소 →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해야”
<복지> • “지금 세상은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못 올라서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거나 재정건전성을 혼드는 것 아니다” • “스웨덴이나 독일 등은 복지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에 도움을 준다. 우리도 복지에 대해 그런 철학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아” • “기초연금, 꼭 되어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즉시 해야” •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확대하면 좋을 것”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인센티브를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서민 생활> • “유통구조 지금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요금 산정 기준도 공개해야” •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설지 못하게 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하고, 금융권이 책임져야”
<재원 마련> •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잘해서 복지정책 등을 하면 재정을 세이브할(줄일) 수 있다” •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혼란 있으니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설명하라” • “비과세 감면 등 정비하는데 일몰이면 무조건 원칙대로 일몰해야”
<공약 이행 의지> •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 “기초연금과 연구개발비 관련 법률안 빨리 하는 게 좋다” •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월 28일~2.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도매시장 돼지 수매·비축량 3,000마리로 확대

○ 농식품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1.7일부터 하루 1,500마리의 **도매시장 수매·비축물량**을 **1.28일부터 3,000마리로 확대**. 지난해 9월부터 **돼지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하고 **양돈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한돈협회와 정부의 협상이 타결된 것. 현재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탕박 기준 **1kg 당 3,024원(2011년 5,843원)**으로 **지난해 4,658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치**, 지난해 생산비 추정치는 3,976원, 경영비는 3,721원으로 돼지고기 가격보다 높게 형성. 수매기간은 1.28일부터 2월말까지로 하루 1,500두로 수매하던 물량을 3,000두까지 확대, 추가물량에 대한 예산은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사업 자금으로 17억2,500만 원 지원. 양돈농가, 돼지 가격 안정 기대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3.1.28)

□ 도시민과 청소년 농촌체험 확대

○ 농식품부, 2013년도 **도시민과 청소년에게** 우수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와 초등학교, 체험마을 등 89개소 선정**. 특히, 올해에는 **초등학교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교 → 50개교로 대폭 확대**해 도시 생활에 지친 아이들에게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전통마을 문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체험**, 도시민과 청소년에게는 **농촌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 제공. 민간단체와 초등학교는 도시민과 청소년의 체험수요를 고려해 당일, 1박2일, 2박3일 단위의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체험비(숙박, 식비 등)는 당일 (2만8,000원), 1박2일 (6만8,000원), 2박3일 (11만2,000원)을 국비로 지원. 농촌체험프로그램에 참여 하려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www.welchon.com)나 선정된 민간단체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1.29)

□ 올해 유망 농식품 업종은 ‘농산물 직거래·생협’

- 통계청, 1.27일, ‘국가 통계에서 찾아낸 2013 뉴 블루슈머’ 자료를 통해 ‘유통단계를 뛰어넘는 소비자’와 ‘글로벌 미식가’ 등이 올해의 ‘블루슈머’*로 선정. 이런 떠오르는 새 소비층을 주목하면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관련 산업에서 성장가능 전망. 통계청이 꼽은 올해의 유망 업종에는 농산물을 산지와 직접 거래하거나 영세 소비자들끼리 뭉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협 등. 또한 동남아 등 이른바 제3세계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에스닉푸드(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해외의 전통 음식) 테이크아웃 음식점’이나 ‘힐링푸드 전문점’의 사업 전망도 밝다고 소개

※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블루오션·Blue ocean)의 소비자(컨슈머·Consumer)라는 뜻의 신조어

자료 : 농민신문(2013.1.30)

□ 작년 견과류 수입 3억 달러...사상 최대

- 관세청, 최근 발표한 ‘최근 10년간 견과류 수입동향’, 지난해 견과류 수입이 사상 최대치. 지난 10년간 견과류 수입액은 연평균 25% 증가, 그 결과 견과류 수입량이 (2011년) 4만8322t(2억9737만 달러)로 2003년 대비 226%(물량 기준), 전년 대비 36% 증가. 지난해 수입된 견과류 중 물량 기준으로 아몬드(47%)>호두(23%)>밤(16%)>코코넛(8%)>캐슈넛(4%)>피스타치오(2%) 순임. 견과류에 대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자료 : 농민신문(2013.1.30)

□ 가축생산성 크게 양상...안우 계층 20%·젓소 산유량 18% 증가

- 농진청, 10년간(‘00~’10) 생산성 변화분석 결과, 한우 거세우(24개월령)의 체중 545kg → 656kg(20% ↑), 젓소(305일 기준)의 산유량 8,086kg → 9,563kg(18% ↑), 육계의 6주제 체중 2.3kg → 2.6kg, 산란계의 산란율 82% → 89%로 향상. 특히 젓소 평균산유량은 2000년 일본이 8,794kg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았으나 2010년에는 9,286kg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 이와 함께 한우 고급육의 생산기술 발달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은 평균 25% → 63%로 2.5배 증가, 돼지 모돈 마리당 연간 이유마릿수(PSY)*는 20.6마리 → 21.5마리로 증가. 이처럼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10년간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과학적 사양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

※ Pig(piglet) per Sow per Year의 줄임말. 어미돼지 한마리가 1년에 낳는 새끼돼지의 마리수를 말하며, 돼지를 생산하는 농장의 생산효율 지표로서 널리 사용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2.1)

□ 보리 수급불안으로 시세 널뛰기 ‘악순환’

- 보리 재배면적이 급감한 가운데 산지 시세 등락폭이 커지고 소비도 침체. 정부, 보리수매 중단으로 재배면적은 3만ha(11년 기준)까지 급감, 생산량 감소. 지난해 보리 수확기 시세는 겉보리(일반보리)가 40kg 포대 당 최고 5만 원까지 치솟는 등 수급불안. 보리(겉보리, 일반보리) 시세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줄곧 강세 기조를 유지해 오다 최근 다소 하락했으나, 소비는 둔화. 이처럼 일반보리 시세가 급등하면서 대부분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찰보리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 찰보리는 40kg 포대 당 지난해 수확기 3만6,000원에서 최근 3만9,000원~4만 원에 거래.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와 흉년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등 파동이 일면서 이번 동절기 재배면적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추정. 올해 산지 보리시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수입 보리 할당관세를 낮춰 시세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농식품부, 수입을 통해 보리시세 인하하고자 2013년 상반기 보리 할당관세를 가공용 맥주보리의 경우 기본 관세율 30%에서 할당관세율 8%(2만5,000톤)를 적용할 방침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28)

연구 지원 정보

1인 가구 동향 -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 본 자료는 2013년 1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1인 가구의 분포와 실태

○ [1인 가구 추이] '90년 9.0%에서 '10년 23.9%로 20년 사이 14.9%p증가, '25년에는 31.3%로 **가구분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4인 가구는 '90년 (29.5%) → '10년 (22.5%)로 감소
 - ※ 1인 가구 비율: '90년(9.0%) → '00년(15.5%) → '10년(23.9%) → '25년(31.3%)
 - ※ 4인 가구 비율: '90년(29.5%) → '00년(31.1%) → '10년(22.5%) → '25년(13.2%)

○ [연령별] '10년 1인 가구는 20대, 3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각각 75만 가구 이상을 유지

- 70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비율은 19.1%이며, 82.2%는 여성

○ [지역별] 도시지역에서는 미혼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농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음.

- 1인 가구 중 미혼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서울에 있는 반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군지역임.

<1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미혼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상위 5개 시군구: 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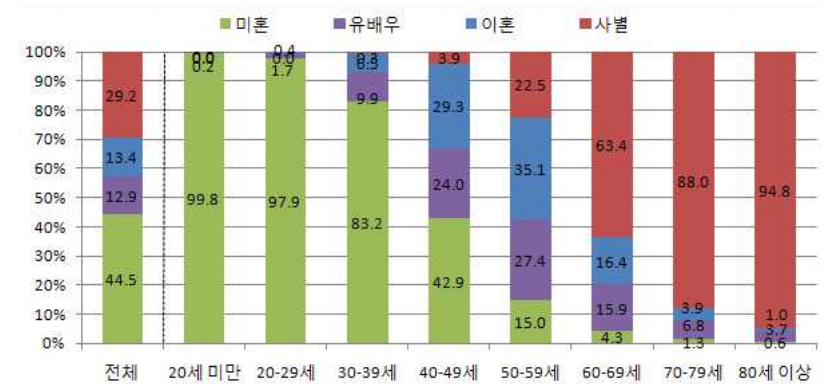
구 분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중	
		미혼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위	부산 중구 (39.6)	서울 관악구 (78.0)	전남 보성군 (71.8)
2위	경남 의령군 (39.5)	서울 강남구 (71.9)	전남 곡성군 (71.5)
3위	서울 관악구 (38.8)	서울 동작구 (69.5)	전북 임실군 (71.5)
4위	전남 신안군 (37.7)	서울 마포구 (68.8)	전북 순창군 (71.3)
5위	경남 합천군 (37.0)	서울 광진구 (68.3)	전남 담양군 (7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혼인상태] 1인 가구 중 미혼 (44.5%), 사별 (29.2%), 이혼 (13.4%) 차지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미혼 비율은 80% 이상이고, 60대 이상부터 사별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져 80세 이상은 94.8% 구성
- 40대와 50대는 1인 가구 중 '이혼'과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이혼 비율은 각각 29.3%, 35.1%이며, 유배우 비율은 24.0%, 27.4%임.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